

최순실 재산 몰수법 추진... 환수 가능할까

압수 수색 등 검증권 부여 민주당, 조사위 구성키로 공소시효 논란 발생

해외재산 추적 어려워 전부 환수 사실상 불가능

‘갑대갑’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지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의원의 40명은 지난 27일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모인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씨 일가의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과 수익을 파악해 국고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증권을 부여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이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그 사이) 재산을 다 빼돌리지 않겠느냐”며 “이걸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추미에 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임을 통해서 최씨 일가 재산의 원천자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 년 전까

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더라도 이미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논리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따라온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수사의 제약이 있으므로 특별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사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다. 수십 년을 얹히고살기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타인의 명의로 숨겨졌을 여지도 있다. 이번 특별법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최씨는 삼성에서 말 한 마리를 받는 것도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람”이라며 “현재까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치밀하게 숨겨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공소시효는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부분 재산이 외국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해외재산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있는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외에 퍼진 최순실의 재산을 전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별법 발의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여망을 모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뉴스

정동영,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은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다.

정동영 의원은 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지해서 노동자를 법밖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주 사업소를 옮겨 다니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기존 관행을 뿌리 뽑고 (무분별한 이동 제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장에서 장기간 격리한다.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자는 임시허가 신청 조치로 구제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근본 대책을 담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의원, 새정부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과 한국반부패 정책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검찰개혁 및 반부패정책과 관련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서보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권의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반부패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자로선 ▲서울고등법원 정지영 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황선철 부회장,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강릉원주대 법대 오경식 교수가 참여했으며,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반부패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조선소 사태, 현대중공업에 책임 물을 것

시민들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사 박재만, “정부의 전향적 해법 요구”

군산조선소 사태에 대해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철저한 책임을 물으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을 비롯한 군산시민들은 군산조선소 전면 가동 중단의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군산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을 현대중공업에 청구하는 등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하의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청원서에는 문제인 대통령이 공약한 ‘현대중공업 정상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의 이면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작전’이라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가장 ‘집단소송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재가동이 안 될 시 특별고용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바라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관측이 만연해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제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중심이 일자리 창출인데 이번 사태로 군산에서 피상적인 일자리만도 5,000여개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의 폐업과 3,858명이 일자리를 잃어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연쇄 반응으로 공단은 물론이고 오식도동, 소룡동 등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 음식점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몰락으로 지역경제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만약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배면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를 획책한 의혹이 있다면 피해자인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만찬 마친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배웅을 받고 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